

## 장애 정책 제안서

제안1 중증장애인 중심의 일자리 지원체계 강화

제안2 탈시설 지원법 제정,  
탈시설 로드맵 예산 확대 및 개편

제안3 고립장애인에게 기회를 ‘장애인 활동소득’ 운영

제안4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선

제안5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 동료지원센터 설치

제안6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  
‘반다비 체육시설’ 설치

제안7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안)

## I

## 현황 및 문제점

## □ 장애인당사자가 요구하는 일자리사업

-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국가 및 사회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으로 ‘소득보장’(48.9%), ‘고용보장’(3.6%) 차지
- ‘2023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 2022년 상반기 대비 경제활동 참가율 38.1%→37.4% 하락. 고용률은 36.4%→36.1% 하락함.
- ‘2023년 장애인통계연보’ 결과, 중증장애인 전체 고용률 4.6%에 그침. 특히, 민간부분 고용률은 2015년 이후 4.1%로 지속되지만 공공부문 고용률은 2019년에 비해 0.1% 하락함.(6.5%→6.4%)
- 2020년 7월, 서울시에서 최초 도입한 최중증장애인 우선고용 일자리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2024년 예산이 전액 삭감되며 400명의 최중증장애인이 해고되는 상황 발생.
- 따라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소득보장’과 ‘고용보장’으로 특히, 최중증장애인에게는 공공영역에서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해야함.

## □ 양천구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성과

- 양천구에서는 매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진행 중.
- 2024년 기준으로 복지일자리 123명, 일반형일자리 111명으로 총234명의 장애인을 고용함. 복지일자리기준 25개 자치구 중 3번째로 많은 인원을 배치받음.(장애인구 상위 9번째/배치인원 상위 3번째)
- 2024년 복지일자리 서울시 자치구별 배치인원(배치인원 상위 5개 자치구)

구분	강서구	중랑구	양천구	은평구	마포구
배치인원	138명	133명	123명	119명	118명
장애인구	28,508명	20,279명	17,621명	21,732명	12,904명

- 양천관내 장애인일자리 수행기관 수상사례

- 2022년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일자리 유공 기관 표창”
- 2022년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일자리 유공 기관 표창”
- 2023년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영님 “일자리 우수참여자 표창”
- 2023년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성님 “일자리 우수참여자 표창”
- 2023년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영 팀장 “장애인일자리 유공자 표창”
- 그 외의 일자리사업 우수참여자로 다수의 장애인당사자가 양천구청장 표창, 양천구의장상 등 표창

- 양천관내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배치를 위하여 복지일자리 수행기관은 공공기관, 민간기관, 협동조합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 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노력 중
- 양천구 관내 배치기관 현황: 교남학교, 공공 도서관, 복지관, 양천구장애인권교육센터, 양천경제사회적협동조합 등

## II

## 제안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III

## 제안내용

-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수행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지원

-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담당자가 홍보, 참여자 선발 및 배치, 수행기관 발굴, 모니터링 및 교육 등의 사업 전반의 업무를 수행 중

###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담당자 업무]

- 참여자 모집을 위한 홍보
- 참여자 선발 과정(상담/접수/면접/기타 행정업무)
- 배치기관 발굴
- 참여자 배치(배치기관 소통/참여자 교육/배치기관 교육 등)
- 참여 모니터링 및 교육(배치기관/참여자 수시 상담 등)

-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복지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인건비 지급 필요

- 양천구일자리플러스센터 내 장애인 고용 전담인력 채용

- 양천구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청장년, 여성, 고령자별로만 정보를 제공 중
- 위의 계층 외의 주요한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 전담인력 채용
- 장애인 채용 정보 데이터 관리 및 직접 연계, 장애인 취업교육 연계 등 적극적인 노력 필요
- 타 지자체 사례: 노원구 전국 지자체 최초 장애인 일자리 전담기관 “노원구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 개관(2021.1.개관/노원구 직접 운영)

### ● 노원구 전국 지자체 최초 장애인 일자리 전담기관 “노원구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 개관

- 2021년 1월 개관, 노원구 직접 운영
- 역할: 맞춤형 일자리 연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일자리 관련 통합서비스 제공, 채용박람회 등
- 직업연계 사례: 지역 내 영화관, 학교, 병원 등
- 관련 기사: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60808324918865>

## I

## 현황 및 문제점

[2022년 UN장애인권리위원회-제2·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CRPD)에 대한 최종 견해]

- 장애인단체와 협의하여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재검토하고, 이 로드맵이 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되게 하며, **충분한 예산과** 기타 조치를 포함토록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형태에 대한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특정 형태의 삶의 방식에 강요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분리에 반대하는 지역사회의 통합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인식제고 활동을 보장할 것
- 여전히 거주시설 환경에 머무르고 있는 성인 및 아동 장애인의 탈시설화 추진을 위한 탈시설 전략 이행을 강화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일 것

### □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탈시설 권리’ 법적근거 부재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2021.8./이하 탈시설 로드맵)’에서 2025년에서 2041년, **총16년 동안 5,452명의 시설장애인의 탈시설을 계획하였음. 하지만 이는 시설 거주장애인의 19%만 해당하는 수치임.**(시설 거주 장애인 28,565명)
- 탈시설 로드맵에 따르면 시설 시설개편 정책으로 시설소규모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UN장애인권리협약(CRPD) 내 시설 소규모화는 탈시설이 아님이 명시되어 있음  
→ **국제조약인 UN장애인권리협약에 준하여 탈시설 정책 수립 필요**

[UN장애인위원회 탈시설 로드맵 개편 방향]

- 모든 거주시설 대상으로 확대
-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 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 등

### □ 탈시설 로드맵 예산 확대 및 개편

- 2023년 탈시설 예산은 48억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예산은 지속적인 증액되고 있음(23년 6,134억→23년 6,290억). 이는 탈시설 예산의 130배로 탈시설 예산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임.
- 또한, 1)탈시설 로드맵에 의한 시범사업의 개선방향으로 **예산의 확보가 미비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주거지를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음.** 실질적인 탈시설 수행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함.

1) 장애인 탈시설로드맵 1주년 토론회 탈시설 시범사업 종합적 검토와 과제(김기룡/중부대학교)

## Ⅱ

## 제안내용

### ☐ 탈시설 지원법 제정

-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명시한 탈시설 지원법 제정

### ☐ 탈시설 로드맵 가속화를 위한 예산 확대 및 개편

- 탈시설 로드맵 추진 가속화를 위한 예산 확대
- UN장애인권리협약에 준한 탈시설 로드맵 개편

## I

## 현황 및 필요성

## □ 장애인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보완할 정책 필요

-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표한 '2022 장애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3%로 전체인구 경제활동참가율(63.7%)의 절반 수준에 불과 →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게 더 나은 기회를 제공 필요
-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 유도를 위해 기회 소득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활성화 필요

## □ 사회적 고립 해소와 문화·여가활동 증대

-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지난 1개월 동안 '전혀 외출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8.8%로 집계됨.
- 문화 및 여가활동은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어 줄 수 있지만 대다수의 장애인(89.4%)은 주로 'TV시청'으로 답하며, 문화 및 여가 활동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장애인은 51.1%로 과반수 이상임 → 많은 장애인이 정서적, 물리적으로 관계망이 단절되어 외로움이 있는 사회적 고립의 상태임
- 운동과 외부 활동 등 장애인 개별 과업(유형, 정도, 연령 등에 반영) 부여 후 참여자의 활동 정도에 따라 활동 계기를 마련해 장애인당사자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포용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함.

## ○ 장애인 기회소득 (경기도, 2023년부터 시행)

- 경기도 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자기 주도적 권리 보장과 사회참여 기회 증진
- 선정인원: 10,000명(신청자 중 추첨선발)
- 지원대상: 경기도민 중 13세 이상~64세 이하,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위소득 120%)
- 사업내용: 스마트 워치를 배부, 매주 2회, 1시간 이상의 가치 활동 참여 인증 시 보상을 지급, 활동을 통해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 비용) 등이 감소하면, 그 역시 가치 창출한 것으로 인정,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으로 장애인 가치 활동에 대한 최초의 인정 사례, 기회소득(지원금) 지급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자기 주도적 운동 목표 수립과 활동을 돕고, 주도적 가치 활동 지원하는 역할 수행
- 지원내용: 월5만원 지원(10개월, 2024. 7부터 10만 원으로 인상 계획), 전액 경기도비 100%  
<https://www.khan.co.kr/local/Gyeonggi/article/202401040600015>  
(경향신문, 장애인활동에 '가치'부여.. 집 밖으로, 사회로 한 발 더, 사회비용 감소 효과)

## II

## 제안내용

### ☐ 활동소득 시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일상 및 사회활동'에 가치를 부여, 신체적, 정신적 고립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활동소득'을 시행

### ☐ 활동계획 목표 달성 시 활동소득을 현금으로 지급

- 활동분야: 운동(소품, 체조, 숲체험, 식습관 관리 등), 문화 및 여가(공연관람, 영화, 전시회, 스포츠 관람, 여행), 교육(평생교육, 악기, 봉사 등) 등
- 활동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목표 달성 시 활동소득을 현금으로 지급

### ☐ 소요예산: 1인당 월 100천원×6개월=600천원

- 서울시 청년수당 1인당 월50만원, 최대 6개월

## I

## 현황 및 필요성

## □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표 개선을 통한 장애유형 포괄

- 2019년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제로 전환됨
- 정부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으로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현재 서비스 종합조사표는 장애인의 신체적 기능제한에 접근을 강화하고 있으며, 장애유형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 발생함

[2022년 UN장애인권리위원회-제2·3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CRPD)에 대한 최종 견해]

- 장애 의학적 모델의 요소를 장애 인권적 모델의 원칙으로 대체하고 장애인에 대한 법적·환경적 장벽을 파악하는 것과 자립생활 및 완전한 통합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하여 장애판정제도를 다시 설정할 것

- 현재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표는 의학적 모델에 기반하여 장애로 인한 기능 제한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항목과 지표로 구성됨에 따라 정신적장애인에게 필요한 환경과 지원을 반영하지 못함. 이에 따라 정신적장애인은 부모, 의료체계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

2022년 장애유형별 활동지원서비스 구간 비율

구분	12~15구간	1~7구간
지체장애	60.2%	1,084명(7.53%)
뇌병변장애	49.46%	1,248명(8.55%)
지적장애	79.93%	328명(0.80%)
자폐성장애	83.62%	18명(0.12%)

\*강은미 정의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장애유형별 활동지원서비스 현황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편 방안 연구(2023년 10월, 한국장애인개발원)

- 현행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는 일상생활동작(13항목, 318점), 수단적 일상생활동작(8항목, 120점), 인지행동 특성(8항목, 94점), 사회활동(최대 24점), 가구 특성(최대 36점), 주거 특성(최대 4점)으로 구성됨.
- 인지행동 특성 항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신체적 장애인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배점이 높음.
- 현행 조사표는 정신장애인들을 완전히 배제한다고 할 수 있으며, 정신장애인은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이 되기도 어렵지만, 급여량이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임.

- 서비스 판정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장애인 개별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연령 기준 폐지

- 정부 만 65세 도래 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대하고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연령 관련 정책 변화]

- 2023년 보건복지부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등록 장애인 신규 지원으로 사각지대 완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대상 활동지원 보전급여 지원
- 2023년 서울시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 지원(만 65세 도래 최종증 독거, 만 65세 이상 시설퇴소자)

- 만 65세 이후 당사자의 욕구 및 필요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장기요양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기초가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65세 이후에 장애 판정을 받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중 65세에 도래하여 장기요양등급(1~5등급) 판정된 경우 활동지원 급여량과 비교하여 최저구간(15구간, 60시간)이상 감소한 경우 보전급여 지원 대상이 됨.
- 현재 활동지원제도는 줄어드는 총량을 보전 및 지원하고 있으나 보전급여를 지원받는 인원은 약 70명(4.4%) 수준임. 또한 적절하지 않은 자격 기준과 산정방식으로 인해 활동지원서비스 총량이 삭감되는 경우가 많음. 매년 고령장애인은 증대되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권리 침해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저해하고 있음.

### [활동지원서비스 연령 제한 관련 사례]

#### ○ 사례1-장애인과 노인복지 제도 사이 갈 곳 잃은 고령장애인(여성경제신문 2023.11.07.)

69세 김○섭 씨는 65세가 되던 해인 4년 전 황반변성으로 양쪽 시력을 모두 잃었다. 병을 진단받을 당시 외부 활동 도움을 받는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를 신청했지만 대상이 아니란 답이 돌아왔다. 현행법상 65세 이후 첫 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중략) 김씨는 결국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 장기 요양 4등급만 받았다. 하루 3시간 남짓 집에서 요양보호사 도움만 받는데, 이마저도 한 달에 20만원을 내야 한다.

올해 65세가 된 지적장애인 송○림 씨는 지자체에서 '65세가 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을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복지부로부터 392시간, 서울시로부터 185시간을 지원받아 총 577시간의 활동 지원 시간을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로 전환될 경우 한 달에 70시간밖에 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사실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방법은 노인요양시설로 들어가는 것뿐이지만, 이마저도 대기 인원이 많아 어려운 상황이다.

#### ○ 사례2-65세 도래 장애노인 활동지원 급여 계산 방식 '위법'(에이블뉴스 2023.5.11.)

지난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던 한 중증장애인이 65세가 도래하여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줄어들자 구청장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지난해 4월 29일 활동지원 추가지원 변경처분이 개인에게는 회복될 수 없는 피해가 우려되고, 가처분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자료가 없다며 본안소송 결정 30일 이후까지 활동지원 서비스 변경의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본안소송에서는 올해 4월 28일 피고(행정기관)가 활동지원서비스 변경 처분한 것을 취소하는 결정을 판결했다. 그리고 원고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원고는 활동지원 1등급이었는데, 새로이 마련된 제도에 의해 5구간으로 이동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 1

등급을 받아 108점(120시간)을 받았다. 활동지원 급여는 다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9등급(240시간)이 됐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받던 활동지원 급여도 100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중략)

재판부는 노인장기요양 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활동지원 급여로 받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노인장기요양과 활동지원 서비스와의 관계를 규정한 법적 근거도 없어 현재의 65세 도래한 장애인 노인의 활동지원 급여의 계산 방식은 위법하다고 하였다. 앞으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노인장기요양과 활동지원 급여 모두를 신청하여 활동지원 급여를 종전과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 2023년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의 '주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일 평균 이용 시간'에 대한 통계 결과에 따르면 전체 369명 중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비율이 25.5%이며, 평균적으로 1일 6.28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 만 65세 도래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을 판정받는 경우 1일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줄어드는 활동지원시간을 보전해주는 시간을 지원받더라도 1일 이용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함.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가 만 65세에 도래하여 급여량이 감소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함. 활동지원급여 이용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해야함.

## □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자립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제도임.
- 보건복지부 탈시설 로드맵에 따른 주거유형별 장애인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시설거주 장애인은 2025년 20,120명에서 2041년 2,193명으로 지역사회 주거 장애인은 2025년 5,830명에서 15,582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에서는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및 자립주거 결정권 강화를 9대 정책분야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장애인 자립 및 주거 자기결정권 강화를 중점과제로 추진 중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역사회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장애인복지법 제55조 활동지원급여의 지원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지원내용의 편차가 크며 한시적인 지원으로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임.

### 지방자치단체-탈시설 장애인 추가지원 내용

구분	구분	지원시간	지원기간
보건복지부	특별지원급여-자립준비	월 20시간	6개월
서울특별시	거주시설 퇴소자	월 120시간	3년
인천광역시	거주시설 퇴소자	월 120시간	1년
광주광역시	거주시설 퇴소자	월 60시간	6개월
대구광역시	거주시설 퇴소자	월 20시간~월 120시간	3년

- 정부 정책에 따라 탈시설 장애인의 지속적인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 확대가 필요함.

### □ 활동지원서비스 사회활동 인정기준 개선

-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제도임. 현재 서비스 종합조사 내 사회활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직장생활과 학교생활을 확인하고 있음.
- 직장생활의 인정기준은 상시 종사하는 직장에 다니는 등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규정함.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 기준에 충족하지 않아 직장생활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함.
- 특히,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로 근로하는 장애인의 경우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이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회활동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보건복지부는 사회활동의 판단 기준을 축소하여 보고 있으며 장애인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있음. 활동지원제도의 목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도록 인정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II

### 제안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제53조(자립생활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 Ⅲ

### 제안내용

- ☐ 장애유형 포괄을 위한 서비스 종합조사표 연구 및 개선
-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연령 폐지
- ☐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확대 및 권리 보장
- ☐ 활동지원서비스 사회활동 인정기준 개선으로 노동권 보장

## I

## 현황 및 필요성

## □ OECD 37개 국가 중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의 평균 재원 기간 1위

-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OECD 국가의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의 평균 재원 기간을 살펴보면 2014년 136.3일, 2016년 153.1일, 2020년 200.4일로 지속적으로 증대됨.(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1)

## □ 정신건강증진시설 중 정신재활시설(정원제) 및 정신건강증진시설(등록제) 한계

- 잠재적 서비스 이용자 621,664명(등록 정신장애인 104,214명, 추계 중증정신질환자 517,450명: 국가정신건강통계 2021)
- 정신건강복지센터 260개소, 정신재활시설 346개소, 정신요양시설 59개소, 의료기관 2,038개소(국가정신건강현황, 2021)로 잠재적 서비스 이용자 대비 지역사회 정신건강 자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 당사자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전무

- 2019년 정신건강복지예산은 전년 대비 12% 증가하여 1,740억 원이며, 그중 정신보건시설 확충 105억,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예산 806억원 등 시설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단체 및 서비스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은 전무한 상황임.

## □ 지역사회에 동료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자립생활 지원의 필요

- Achieving the Promise : Transforming Mental Health Care in America(2002) 보고서 발간을 통해 증상 소거보다는 인간 고유의 능력과 통제력을 회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함. 즉, 자립생활 지원으로 서비스 패러다임을 전환함.
- 약물중독 및 정신건강 서비스국(Substance Abuse And Mental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SAMHSA)은 동료지원을 전달체계에 포함하였고 2007년부터 의료급여에서 동료지원 임금을 부담함. WHO의 연간 보고서에는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개발 및 보급하여 시행된 방법들을 보고하고 있는데, Peer Support(동료 지원)을 해당 방법으로 명시함.

- 장기병원 입원으로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증상 회복이 더디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 곤란함. 이러한 상황을 지원하고 옹호하는 동료지원센터가 매우 부족하여 당사자의 증상 및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어려움. 이로 인해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 및 사망하고 있어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회복을 지원하는 동료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함.

## II

## 지원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계획의 수립 등)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  
(단체·시설의 보호·육성 등)

## III

## 제안내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자립지원 신설
- 회복과 권리주체로 당사자를 인정하고 동료지원센터를 전달체계에 독립적인 기관으로 포함
- 동료지원가를 당사자 단체에 의한 양성을 통해 정신재활시설이나 유관 기관에 파견

### □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동료지원센터 설치

[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및 회복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 역할 ]

- 정신건강복지센터 주 업무: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위기개입, 정신건강증진사업(정신건강사업안내, 2023년)
- 정신재활시설 주 업무: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정신건강사업안내, 2023년)
- 동료지원센터 주 업무: 동료에 의한 서비스 및 인권 증진 활동, 자립생활 지원

## I

### 현황 및 필요성

#### □ 장애인 생활체육 부족, 2차 장애 유발 및 의료비 지출 증가

- 장애인 당사자의 경제적 여건, 지역시설의 장애인지 부족 등으로 신체활동에 제약 받고 있으며 건강관리를 위한 활동 전무
- 이로 인해 비만, 고혈압, 당뇨 등 2차, 3차 장애, 만성질환 유발 및 의료비 증가

#### □ 지역사회 운동시설 및 프로그램 부재, 장애인 생활체육 실태 열악

- 지역사회 내 주민센터, 문화체육시설의 물리적 접근성 제한 및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부재
- 지역사회 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 설치 필요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이 2010년 8.6%에서 2020년 24.2%, 2023년 33.9%로 10년간 증가추세임. 그러나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전체 생활체육 참여율(22년 61.2%) 비교할 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임. 대부분 혼자(64.8%) 운동하며, 생활체육 지도자와 함께 운동하는 참여자는 1.2%로 매우 낮음. 운동 목적에 대한 답변으로 건강증진 및 체력관리가 84.3%, 2020년 이후로 ‘건강 및 체력 관리’ 응답이 80% 이상으로 응답률 높아진 경향이 있음.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는 높아졌으나, 대부분 혼자 운동을 하며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2023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생활권 주변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중 혼자 운동하기 어려워서(26.9%), 시간이 부족해서(19.0%), 체육시설과 거리가 멀어서(12.9%), 체육시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10.5%)로 나타남. 생활권 주변 이용하고 싶은 체육시설은 통합 공공체육시설(29.5%), 장애인 우대 공공체육시설(26.7%)로 나타남. 그리고 생활권 주변 이용하고 싶은 구체적인 체육시설로 수영장 포함 종합센터(42.5%)로 가장 높았으며, 헬스 시설장(19.6%), 실내 체육관(18.2%) 순으로 나타남. 지역 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II

###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 생활체육진흥법 제3조(국민의 생활체육 권리)
- 생활체육진흥법 제8조(생활체육강좌의 설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 Ⅲ

## 제안내용

- 양천구,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 ‘반다비 체육센터’ 설치 추진
-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 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체육시설 건립
- 장애인 우선 사용 보장 및 장애인 맞춤형 건강관리프로그램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
- 장애인-비장애인 통합적 이용 환경 구성, 지역사회 통합 추진



## I

## 현황 및 필요성

## □ 정당한 편의 미제공으로 장애인 참정권 침해

-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임시조치 등 명확한 지침 및 안내가 없는 상황에서 혼란 야기 및 투표 보조 거부로 투표 제한 사례 발생
- 접근 불가능한 투표소 지정, 편의시설 미설치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참정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음
- 지역사회 내 모든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 필요

## II

##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 공직선거법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 III

## 제안내용

## □ 공직선거법 개정

- 투표 보조 지원 대상 확대(시각장애, 신체장애, 발달장애)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⑥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교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6., 2004. 3. 12.>

## □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

- 제67조의2(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단서조항 삭제

제67조의2(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① 투표소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이하 이 조에서 “이동약자”라 한다)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하여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투표소 입구에 이동약자를 보조할 투표사무원 등을 배치하거나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등 이동약자가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참고1

##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자 인원

자치구	2024년 참여자 인원		2022년 장애인구	
종로구	25	46명	24	5,834명
중구	24	46명	25	5,552명
용산구	23	53명	23	7,621명
성동구	22	65명	21	11,092명
광진구	18	73명	19	15,158명
동대문구	15	77명	12	11,615명
종랑구	2	133명	5	15,345명
성북구	8	99명	10	12,183명
강북구	13	80명	11	14,317명
도봉구	19	72명	13	18,785명
노원구	6	110명	2	15,481명
은평구	4	119명	3	14,654명
서대문구	12	80명	18	17,186명
마포구	5	118명	17	12,348명
양천구	3	123명	9	18,520명
강서구	1	138명	1	10,158명
구로구	11	86명	8	20,228명
금천구	20	71명	20	17,471명
영등포구	14	78명	15	20,571명
동작구	17	73명	16	26,696명
관악구	9	90명	6	12,904명
서초구	10	89명	22	21,732명
강남구	21	66명	14	17,621명
송파구	7	103명	4	20,279명
강동구	16	75명	7	28,508명
계	2,163		391,859	

## 참고2

##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관련

### ○ 시·군·구 단위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 신규 건립

- ◇ (목표) 장애인이 생활권 내에서 언제든지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을 통해 스포츠 기본권 보장 ('27년까지 150개소)
- 기존 체육시설(공공, 민간 포함)은 비장애인 체육활동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 체육까지 확대 활용하는 것은 한계
  - \* 전체 국민의 생활체육시설의 충족률은 65% 수준으로, 35%가 체육시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10분내 접근가능 기준,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 ○ 주요내용

- 개소별 체육기금 30~40억 정액지원(지방비 매칭) / 지자체 특성에 맞게 특수학교 연계, 리모델링 등
- 시설(수영장, 다목적홀, 재활운동 공간 등), 지도자, 프로그램, 운동용품 등 통합 제공을 통해 정책 전달 체계를 완성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기반 커뮤니티 센터 기능 수행

### ○ 수요

- (지자체 수요) 기초 지자체 전수조사(18년 4월, 228개)결과 건립이 필요한 시설은 259개, 참여 의향이 있는 지자체는 130개로 조사
- 장애인 인구 분포(시군구별 1개소 건립이 아닌 장애인 인구 분포 등 고려 배치)

구 분		장애인 체육 종목(안)
체육관형(80개) 수영장형(40개)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럭비, 배구, 배드민턴, 사격, 수영, 역도, 유도, 탁구, 펜싱
종목 특화형 (30개)	동·하계 종목 특화	골프, 론볼, 볼링, 사이클, 양궁, 아이스하키, 컬링
	해양·수상종목 특화	요트, 조정, 카약, 카누, 수상스키
	장애 유형별 특화	골볼(시각), 보치아(뇌병변 등)

### ○ 운영방향

- (공모) 기초 지자체(시군구) 단위로 공모를 통해 선정. 지역수요 맞춤형 건립 추진
- (운영) 장애인의 우선이용권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시설로 운영
-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장애인 우선 이용을 명시하도록 유도

#### <사례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5조의2(장애인 우선 사용 및 이용) 시장은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센터를 장애인이 우선 사용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시·군·구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센터 명칭 : “반다비 체육센터”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의 마스코트인 “반다비”를 시·군·구 생활 밀착형 장애인 체육센터의 명칭으로 활용

- 시·군·구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센터가 2018평창동계패럴림픽의 유산 (레거시)임을 밝히고
- 평창패럴림픽 대회 기간 전국민의 사랑의 받았던 마스코트를 활용하여 시설의 인지도를 제고

○ 추진 현황

- 대한장애인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반다비 체육센터 선정위원회 개최 (2019.3.)
- 현재 선정된 지자체별 건립 추진 중: 현재까지 90개소의 건립 지원 확정
- 2019년(30개), 2020년(23개), 2021년(13개), 2022년(11개), 2023년(13개)
- 현재 8개소 운영 중: 광주북구, 경남양산, 전북익산, 경남고성, 전북부안, 전남곡성, 경기동두천, 경남진주

※2023년도 반다비 체육센터 선정현황(총 17개 시·도 90개소)

연번	시도	개소수	시군구(유형)
1	서울	1	송파구(체육관)
2	부산	1	해운대구(종목특화-컬링)
3	대구	2	중구(수영장), 수성구(수영장)
4	인천	2	서구(수영장), 연수구(수영장)
5	광주	4	남구/북구(수영장), 서구(체육관), 광산구(종목특화-보치아)
6	대전	1	유성구(수영장)
7	울산	1	남구(종목특화-빙상)
8	세종	1	세종시(종목특화-빙상)
9	경기	18	가평군 외 15곳(체육관, 수영장)
10	강원	5	강릉시, 화천군, 속초시(체육관), 춘천시(수영장, 체육관)
11	충북	6	괴산군 외 3곳(체육관, 수영장), 충주시(종목특화-보치아)
12	충남	14	공주시 외 12곳(체육관, 수영장, 종목특화-보치아, 골볼)
13	전북	10	익산시 외 7곳(체육관, 종목특화-볼링, 수영장)
14	전남	9	고흥군 외 8곳(체육관, 수영장)
15	경북	5	안동시 외 4곳(체육관, 수영장)
16	경남	7	거제시 외 6곳(수영장, 체육관)
17	제주	3	서귀포시(수영장), 제주시(수영장)
합계		90	

※반다비체육센터 개관 현황: 총 8개소(2022년 3개, 2023년 5개)

순	개관일	시도	시군구	유형	시설명	관리	비고 (선정년도)
1	22.8.18.	광주	북구	수영장	북구 반다비체육센터	(시설)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 (프로그램)북구장체	2020
2	22.10.5	경남	양산	수영장	양산 반다비체육센터	양산시시설관리공단	2019
3	22.12.14.	전북	익산	체육관	익산 반다비체육센터	직영(익산시)	2019
4	23.3.2.	경남	고성	체육관	고성 반다비문화체육센터	(시설)직영 (프로그램)고성장체	2020
5	23.3.13.	전북	부안	체육관	부안 반다비체육센터	부안군장체	2019
6	23.6.29.	전남	곡성	체육관	곡성군 반다비체육센터	직영(금년중 장체위탁)	2019
7	23.7.3.	경기	동두천	체육관	동두천 반다비체육센터	직영(동두천시)	2020
8	23.11.21.	경남	진주	체육관	진주시 반다비체육센터	-	2019

#### ○ 참고자료

-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유산(legacy) 창출을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관계부처 합동/2018.8.14.)
- 2019년 첫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지원 대상 선정(대한장애인체육회/2019.3.14.)
- 반다지 체육센터(생활밀착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선정 현황(대한장애인체육회/2023.7.)
- 모두가 이용하는 24년 반다비체육센터 15개소 건립 지원(문화체육관광부/2023.12.21.)

## ○ 관련 기사

## 장애인 참정권 침해, 지선까지 뿌리 뽑자

20대 대선 63건 차별...투표보조 거부·편의 미제공  
중앙선관위 항의방문 “재발방지 요구” 면담 요청도

이슬기 기자 입력 2022.04.13 15:18

댓글 0

다운로드 프린트 공유



13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장애인 참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모습. 이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7개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응팀’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장애인 투표권이 어김없이 침해됐다.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발달장애인과도 투표보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까지 변경했지만, 전국 곳곳에서 가족에 의한 투표보조는 거부됐다. 그런가 하면 여전히 접근이 어려운 투표소로 인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차별사례도 속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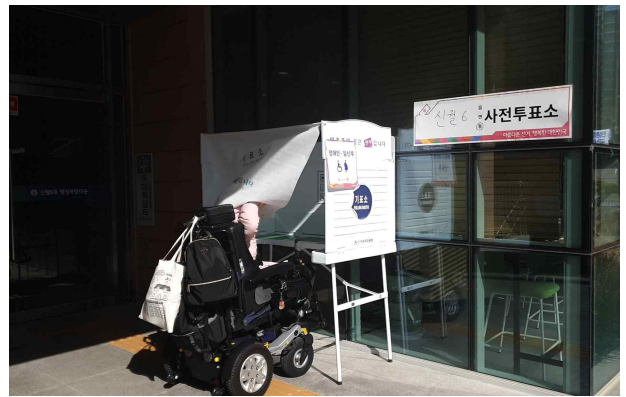
에이블뉴스(2022.4.13.)



○ 관련 사진



양천구 신정2동 사전투표소



양천구 신일6동 사전투표소



양천구 신일7동 사전투표소